“SRF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인근 주민들 아우성

광주 효천지구 주민들 고통 호소…“저녁엔 더 심해져 숨 쉬기도 힘들어”
창문 못 열고 빨래도 밖에 못 널어…광주시에 3년동안 민원 180건이나
남구 “측정 결과 문제 없다” 시 “운영업체가 해결할 문제”…대책 손 놓아

“지금도 냄새가 나지만 저녁에는 더 심해져서 숨을 쉴 수가 없다. 비 오는 날은 특히 심하다”. 6일 만난 박정규(61·광주시 남구 행암동)씨는 이렇게 말했다.

전세은(여·21)씨도 “여름만 되면 밤에 냄새가 정말 심하다”며 “음식물 쓰레기 썩는 냄새처럼 느껴지는데, 찐득하고 무거운 악취가 안에 퍼지는 것 같다. 3년전부터 냄새가 나더니 요즘 들어 점점 더 심해진 느낌이다”고 말했다.

광주시 남구 행암·임암동 등 효천 1·2지구 주민들이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에서 밤낮없이 풍기는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SRF 처리장으로부터 1㎞여 떨어진 지역인데도, 바람이 불 때마다 코 끝을 찌르는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최복단(여·79)씨는 “요즘은 거의 날마다 냄새가 나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다. 새벽 3시까지도 냄새가 나니까 참다 참다 시청 당직실에 전화를 했던 적이있다”며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바뀌는 게 없다. 이제는 말로만 할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이웃들끼리도 이야기 하고 있다”고 했다.

악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광주시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내 청정빛고을이 운영하는 SRF 제조시설로부터 비롯됐다는 게 주민들 주장이다. 이곳은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선별, 파쇄, 건조해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는 작업을 하는 곳으로 시설 일일 800 t 의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며 운영기간은 오는 2032년 1월까지다.

악취 민원도 최근 3년간 광주시에만 100건이 넘게 들어왔다. 2023년 18건, 2024년 56건 등에서 올해는 105건으로 늘었다.

주민들의 단체대화방에서는 “집단 민원을 제기하자”는 등 대화가 매일같이 쏟아지고 ‘악취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작성법’을 공유하는 내용도 퍼지고 있다.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며 “SRF 시설에서 오후, 저녁 시간대에 문을 열어 놓고 야간 작업을 해 냄새를 풍기는데 시에서는 현장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악취 민원 관련 간담회를 열고도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집단 민원에도, 지자체는 “악취 측정을 해 보니 문제가 없었다”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남구는 지난 2023년 SRF시설에 대한 악취 오염도 검사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악취의 원인으로 단정 지을 수 있는 것도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는데, 자치단체는 측정치에 미달하는 악취라거나 어디에서 나는지 확인도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는 식이다.

광주시 또한 SRF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가 해결할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SRF 운영 업체인 청정 빛고을과 협약에 따라 개선방안에 대한 입장도 청정빛고을 측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며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와 감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6일 오후 광주시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전경. 인근 행암동 주민들이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나명주 기자 mjna@

“포스코이앤씨, 시민 혈세 강탈 시도 중단하라”

2100억 SRF 손실보조금 청구에 광주시민단체 중재 중단 촉구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운영 손실과 관련, 광주시에 2100억원대의 손실보조금을 청구한 포스코이앤씨(포스코)에게 중재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 지역 67개 시민단체가 모여 결성한 ‘포스코의 시민혈세 강탈 시도 저지 광주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6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는 즉각 중재 중단을 선언하고 광주시민 혈세 강탈 시도를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포스코가 중재 진행 도중 기습적으로 중재 신청 금액을 27배 증액해 중재 절차의 취지를 거스른 점, 증액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중재 자체가 2년을 경과해 제도의 목적인 신속성을 잃은 점 등을 제시했다.

대책위는 “이 사건은 중재 절차가 아니라 공정성과 신뢰성,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법적 절차와 판단에 의해 다뤄져야 한다”며 “광주의 국회의원들도 나서서 중재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중재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법률 개정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포스코가 대표로 있는 특수목적법인(SPC) 청정 빛고을은 지난 2017년부터 광역위생매립장에서 SRF를 생산해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전량 판매해 왔으나, 가동 1년만에 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운영 손실을 봤다. 포스코는 지난해 4월 광주시에 78억원의 운영비를 보존해 달라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며, 6차례 중재 과정에서 손실액을 2100억원으로 증액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금타 화재 피해 2공장 본격 해체 수순

광산구, 최종 허가…이달 중 철거 작업 돌입할 듯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지난 5월 대형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2공장(정련 공정 건물)에 대해 본격적인 해체 수순에 들어간다.

6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는 이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련 공정 건물의 해체를 최종 허가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화재로 구조물 붕괴 위험이 커짐에 따라 건물 해체 계획서를 광산구에 제출한 바 있다.

앞서 건축물해체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 열린 심의에서 안전 조치 보강 등을 조건으로 해체를 조건부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시공사를 선정하고 광산구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절차를 거친 뒤 착공 신고를 마치면 즉시 철거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착공을 위해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토안전관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이르면 이달 중 해체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5월 17일 발생한 화재는 고무 정련을 위한 산업용 전기 오븐에서 불꽃이 발생한 것이 최초 발화로 추정되지만 건물 붕괴 위험 탓에 내부 진입이 어려웠던 수사 당국은 아직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당국은 해체 작업과 병행해 현장 감식 등을 다시 진행하고 화재 원인을 추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여천NCC 영업 부진에 3공장 가동 임시 중단

석유화학 산업 장기 불황으로 여천NCC가 8일부터 전남 여수 3공장 가동을 임시 중단키로 했다.

사측은 생산시설을 비우고 질소를 충전해 설비를 보호하는 조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천NCC는 여수 국가산단 내 3개 공장에서 에틸렌을 생산하고 있다. 연간 생산량은 1공장 90만t, 2공장 91만 5000t, 3공장 47만t이다.

3공장 가동 중단으로 줄어든 생산 능력은 현재 80% 수준인 1, 2공장 가동률을 높여 채울 것으로 알려졌다.

여천NCC 관계자는 “영업 부진에 따라 임시 중단을 결정했다”며 “가동 재개 여부와 시기 등은 앞으로 시황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5·18 정신적 손배 위자료 지역별 격차 해소를”

5·18 피해자들 대책 마련 촉구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가 법원에 따라 최대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문제<광주일보 2024년 9월 30일 6면>와 관련, 5·18 피해자들이 정부와 국회, 사법부에 “판결 불균형 해소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불균형 해소 추진위원회 등은 7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연다.

단체는 미리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 국회, 사법부는 위자료 불균형 판결 피해자 구제 특별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며 “정부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 시효를 폐지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2021년 헌법재판소가 5·18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피해자 1000여명은 서울중앙지법에, 2000여명은 광주지법에 개별 소송을 냈다”며 “하지만 위자료 산정 기준을 법원 재량에 맡기면서 두 법원 간 위자료가 2~4배 차이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똑같은 사망자를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법은 4억원, 광주지법 등은 2억원 판결을 내렸고, 심지어 구금 위자료 산정기준은 명확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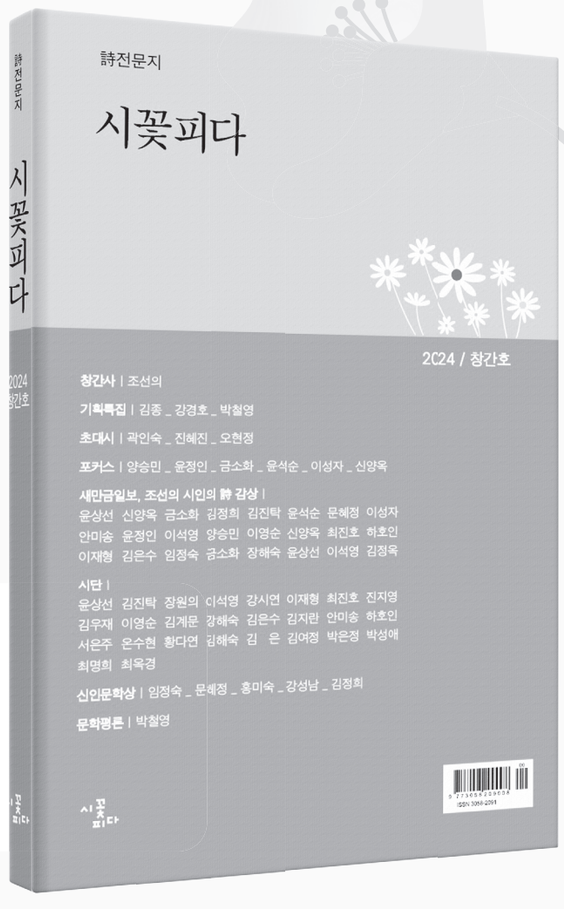
단체는 “국가폭력 피해자를 보상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로서 당연한 정의이며, 보상 과정과 결과도 정의로워야 5·18 정신이 올곧게 계승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신춘문예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촛불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빛을 소환하다』『꽃 향기의 밀서』,『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창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창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창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